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834
----------	------

발의년월일 : 2016. 5. 2.

발 의 자 : 김정택 의원 등 20인

□ 주문사항

- 붙임 ‘결의안’ 과 같음.

□ 제안이유

- 경기도는 지난 2016년 3월 25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 3개 공공기관을 신설법인(가칭)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거나, 테크노파크 명칭 변경 불가시 경기테크노파크를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추진 중에 있음.
-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은 경기테크노파크의 설립근거, 고유기능, 출연구조, 전문성과 차별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또한, 관계기관(안산시, 산업통상자원부, 경기테크노파크)의 의견을 전혀 수렴 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경기도의 행태는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단독 소유의 기관이 아니고 산업기술특례법에 의해 설립·허가되고, 안산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의사결정시 해당기관의 협의가 필요하고, 법인의 해산 및 통합에 대한 절차도 이사회 2/3이상의 찬성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경기도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강행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임.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목적은 기능중복 해결, 재무구조 건전화가 기본 취지라고 볼 때, 재정자립도가 115%로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큰 수익을 올리며 빠른 속도로 성장 가능한 경기테크노파크와 재정적자가 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간의 무리한 통합은 오히려 재무구조 건전화를 해칠 우려가 있고, 통합된 거대 조직은 오히려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적인 구조를 보일 수 있으며, 강제적 통합으로 인한 조직에서 직원 간 불화와 고용불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통합의 실효성 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따라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를 제외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함.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

경기도는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통합 대상에서 제외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경기도는 지난 2016년 3월 25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발표를 통해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 3개 공공기관(경기중소기업중
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신설법인 (가칭)경기경제산
업진흥원으로 통합하거나, 테크노파크 명칭 변경 불가시 경기테크노파크를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전환하여 테크노파크 명칭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은 유감스럽게도 경기
테크노파크의 설립근거, 고유기능, 출연구조, 전문성과 차별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관계 기관(안산시, 산업통상
자원부, 경기테크노파크)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물
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¹⁾으로 설립근거와 사업이 어느 기관보다 명확하고,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뿐만 아니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인으로 경기도 조례의 제·개정으로 통합
되거나 폐지될 기관이 아님을 밝힌다.

1) 법 취지 : 기업, 대학, 연구소의 집적화로 기술 공동개발, 기술의 사업화, 상호 협력을 위한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둘째, 경기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 안산시,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의사결정시 해당기관의 협의가 필요하고, 법인의 해산 및 통합에 대한 절차는 이사회 2/3이상의 찬성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경기도가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적으로 밀어붙이듯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법규를 무시한 처사임을 밝힌다.

<경기TP 출연비율>

(단위 : 백만원)

합계	안산시	산자부	경기도	민간
101,496	53,500(52.7%)	24,447(24.1%)	23,249(22.9%)	300(0.3%)

* 현재 진행중인 한양대학교 소유의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안산시가 경기TP에 출연할 경우(2017년 상반기 교환 예정) 안산시의 출연비율은 현재 52.7%→71.6%(120,822백만원 예상)로 상승

<경기TP 이사회 구성>

합계	안산시추천	산자부 추천	경기도 추천
15명	9명	3명	3명

셋째,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1998년 11월 개원 이후 2)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서 기술, 인력, 교육, 문화의 공급기지 역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산·시화 스마트허브 인근에서 입주기업 2만 여개 업체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과 함께 첨단 산업기술을 지원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특화기능 수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받아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이러한 특화사업을 통해 도내 1,800여개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내 공공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 2) 안산사이언스밸리 : 안산에 위치한 산·학·연·관 핵심 혁신 주체들로 구성된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로서 경기TP를 중심으로 8개 기관 200여개 중소 벤처기업 등이 집적되어 있음
- 경기TP, 한양대학교 ERICA,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농어촌연구원, LG이노텍 안산R&D캠퍼스

<경기TP 특화기능>

기능	지식재산 창출 및 컨설팅 지원	기술이전 및 BI사업	뿌리산업 육성	IT/SW 융합	기술닥터
중앙정부 (지정 년도)	특허청 (2003년)	산업부 (2003년)	미래부 (2011년)	미래부 (2002)	경기도 (2009)
지원성과 (기업)	800여개	50여개	60여개	40여개	700여개

넷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목적은 기능중복 해결, 재무구조 건전화가 기본 취지라고 볼 때 경기TP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간에는 기술과 마케팅으로 기능, 역할 분리가 명확하고, 경기TP의 재무구조는 매우 건전한 편으로(재정자립도 115%) 재정 적자가 큰 기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누적적자 392.2억원(용역보고서 내용 인용))과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할 경우 재무구조 건전화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통합된 거대 조직(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직원 400여명)은 오히려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적인 구조를 보일 것이 예상되며, 강제적 통합으로 인한 조직과 직원 간 불화와 고용불안 문제를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 통합의 실효성 보다는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안산시의회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를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제외’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경기도가 안산시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껍 막힌 입장을 취한다면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안산시의회에서 제시하는 당위성과 현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2016. 5.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